

## “공안탄압 광풍, 총파업 투쟁 들불 키운다”

24일, 긴급 투본회의·기자회견 ... 윤 정권, 경제실패·국정운영 위기 공안몰이로 돌파 발악

금속노조가 2월 24일 노조 경남지부에서 긴급하게 ‘금속노조 투쟁본부 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경남지부 침탈에 대응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노조는 금속노조 지부, 지회에 대한 모든 압수수색을 전면 거부하고 압수수색 시도 시 해당 지역 확대간부를 집결시키기로 했다. 노조는 3월 2일부터 3월 10일 기간에 각 지역 국정원 앞에서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중앙 여론전을 강화하고 각 조직에 공안탄압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노조는 각 사업장에 윤석열 정권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현수막과 성명서 게시 지침을 내리고, 조합원들에게 탄압 상황을 알리고 교육하기로 했다.

노조는 2월 27일 여는 57차 정기대의원대회와 각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확대간부와 조합원이 참여하는 신문광고



를 집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2조 1항7조 1, 3, 5항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과 연계해 지회별 ‘위헌 결정 촉구 의견서’ 제출 운동도 병행키로 했다.

금속노조는 투쟁본부 회의에 이어 국정원 경남지부 앞에서 ‘국정원 앞세운 공안정국 노동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안석태, 강인석 두 동지가 간첩이라면 금속노조 위원장도 간첩이어야 한다”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국가보안법으로 전체 금속노조 조합원을 간첩으로 내몰려면 한

번 해보라”라고 국정원을 규탄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경제위기로 민중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렸는데 실정을 댈기 위해 공안탄압,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질타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안탄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을 결심하고, 금속노조는 2월 27일 5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월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7월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의 공안탄압이 이어진다면 총파업 시기는 빨라지고, 강도는 더 강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2월 23일 안석태 노조 경남지부장과 강인석 거제통영고성 조선헌청지회 부지회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지부 사무실, 집,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다.

# 대구지법 항소심,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판결

대법원 법리·판례·관련 법 무시에 제조업 파견 허용 주장까지 ... “비논리, 비접합 가득 찬 판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월 17일 원청의 불법파견 범죄에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를 변호한 태평양 법무법인 출신 판사가 불공정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차현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영화 부장판사는 아사히글라스의 파견법 위반을 인정한 네 건의 재판 판결문을 읽어나 봤는가”라며 “재판부는 객관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해야한다. 오죽하면 검찰마저 22일 상고했다”라고 질타했다.

차현호 지회장은 “이영화 판사는 현장 조사와 검찰 대질신문 등에서 드러난 사실을 모두 배척하고, 원청에 무죄를 주기 위해서 사측 주장만 끌어다 썼다”라면서 “수십 명의 증인 신문, 세 번의 현장 검증, 1만 쪽이 넘는 공판 증거 자료가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판사는 판결문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썼다”라고 규탄했다.

차현호 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사업장과 모든 불법파견 현장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킨다”라며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끝까지 이 판결을 규탄하면서 힘차게 싸우겠다”라고 결의했다.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대구지법 4 형사부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다수 하급심 법원이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기 위해서 축적한 수많은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을 했다”라면서 “비논리에 비접합으로 가득 찬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원청이 무엇을 하든 간에 ‘원청의 계약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겠다는 판결이다. 판결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일일이 법률적으로 나열하기 힘들 지경이다”라며 “재판부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에서 중간착취를 인정해야 한다, 위장 도급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사용자의 자유이고, 그것이 자본주의다’라는 것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4 형사부는 대법원의 법

리와 판결마저 다 무시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한다’라는 근로자파견법을 무시하고,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문자 한 통으로 집단해고를 당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9년째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2심, 임금소송 1심, 사측 불법파견 처벌 형사재판 1심에서 모두 승소해 아사히글라스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노조는 “대구지법 항소심은 산업현장에 20년 넘게 만연한 불법파견 범죄행위의 시정과 원상회복을 염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았다. 원청의 불법파견 범죄를 옹호, 묵인하고 자본의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판결이다”라고 질타했다.

# 자본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노동부

LG전자 노사협 규정, “영업비밀, 정보공개 거부” ... 한국노총 노조에 근로자위원 선출권 주려 꼼수

노동부가 금속노조가 제기한 ‘LG전자 노사협의회 정보공개 청구’를 노조가 ‘제3자’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금속노조와 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는 노동부가 특정 의도로 금속노조를 ‘패싱’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와 지부, 지회는 2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조합 패싱, LG전자 노사협의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LG전자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를 무시하는 노동부와 LG전자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LG전자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기능직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소속 LG전자 노동조합이 임의 위촉하고, 사무직 근로자위원은 간접 선출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다.

2021년 사무직 노동조합인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가 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으로 LG전자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LG전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 노사협의회를 새로 구성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는 노사협의회 참여를 위해 새로 구성한 노사협의회 전반에 관한 정보를 사측에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 확인



을 위해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금속노조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박경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2001년 2월 8일 결성한, 20년이 넘는 단일노동조합이다”이라면서 “사업장별 단체협약 체결 권한,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당연히 금속노조가 모두 관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경선 부위원장은 “단체교섭 당사자인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의 노동조건과 관계있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노사협의 결과 등을 알 권리가 있다”라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LG전자와 자본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설정석 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장은 “노사협의회 구성을 바꾼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위원회에 LG전자 지회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

으나 사측은 답변을 회피했다”라며 사측의 ‘금속노조 패싱’을 증언했다.

설정석 지회장은 “어렵게 확보한 개정 노사협의회 규칙을 살펴보니 노조 탄압에 열중하는 사측의 민낯이 보였다”라면서 “LG전자의 노조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가 LG전자의 의견을 따라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이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라면서 “근로자참여법 정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과 영업상 비밀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노동부를 질타했다.

서범진 변호사는 “어렵게 구한 LG전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보니 근로자참여법을 위배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라며 “LG전자가 한국노총 노조에 근로자위원 선출 권리를 주려고 말도 안 되는 편법 규정을 만든 듯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으로 대응하고, 금속노조를 배제하는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을 시정하기 위한 노동부 진정을 제기한다는 투쟁 계획을 밝혔다.